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5년 7월 1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주요 현안

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7.1(화)부터 시행함.
- 이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임.
-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06.3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nBmnuClBgPRxGcPVCK786ddU.mogef20?mid=news405&bbtSn=71055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함.
- '2025년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5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6.4%인 5.3조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임.
-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총 사업비(순지방비)는 전년대비 1.5조원(14.1%) 증가한 12.2조원이 투입됨.
- ☞ 올해 수립되어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연장, 노인자살률 및 빈곤율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힘.

참고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5.07.04.]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496&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면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지원

- ☞ 고용노동부는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에 가장 큰 애로인 대체인력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하여 7.1(화)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지원함.
-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함.
- * 지원 내용 :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원, 기업당 최초 사례 2명에 대해서만 지원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06.30.]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998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저출생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2025. 07. 02.	합성·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 등을 금지하고, 합성·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함으로써 합성·유사니코틴함유제품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 및 제59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2025. 07. 11.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 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하려함(안 제2조, 제12조, 제14조 삭제, 제14조의2 신설 및 제28조 삭제).
여성고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의원 등 12인)	2025. 07. 11.	사업주가 제출하는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남녀임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젠더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의원 등 11인)	2025. 06. 27.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와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함(안 제29조제12항 신설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의원 등 10인)	2025. 06. 30.	가정폭력 사망사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통해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조의8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의원 등 11인)	2025. 06. 27.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취소·변경·연장 등의 조치를 할 경우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톱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 조정하며, 잠정조치에 상담·의료 위탁을 추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의원 등 10인)	2025. 06. 30.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행사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현황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기관 협업과제 토론회	25.07.01.	여성신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위한 토론회 개최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395
		뉴스1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 단위 통합지원"... 유관기관 토론회 개최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830944
		천지일보	여성폭력 피해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8일 토론회 개최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8086
	25.07.02.	여성신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위한 토론회 개최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462

과제/행사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여성기업정책 토론회	25.07.02.	뉴스시스	"저성장·저출생 시대, 여성기업 역할은?"… 국회서 토론회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02_0003235853
		매일일보	저성장·저출생 해결책 '여성기업'… "출산·육아 장벽 넘어야"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55827
		전자신문	"저출생·고령화 시대, 여성기업 역할 강화 논의… 정부 '여성친화 정책 확대' 약속"	https://www.etnews.com/20250702000200
		아시아 경제	"저성장·저출생 위기 속 여성기업 역할 강화해야"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70212155176952
		헤럴드 경제	저출생·고령화 속 여성기업 역할은… 여기중 정책토론회 개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22801?ref=naver
		프라임 경제	저성장·저출생·고령화' 극복 위한 여성기업 역할 강화 논의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94767
		부산일보	"여성기업 산업생태계 이끄는 주역으로"… 국회에서 역할 강화방안 토론회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70214100976416
		이투데이	"저성장 위기 속 여성 기업 역할 중요… 정책적 지원 뒷받침돼야"	https://www.etoday.co.kr/news/view/2484166
		파이낸셜 뉴스	김성섭 중기부 차관 "여성기업 성장 위한 지원 확대"	https://www.fnnews.com/news/202507021344274264
		MTN뉴스	"여성기업이 새 산업 생태계의 주역으로 성장해야"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70215384751855
	25.07.03.	여성신문	"여성기업인 남성보다 여전히 불리"… 1순위는 일·가정 양립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536
		산업일보	여성기업, '정책 대상' 아닌 '성장 주체'… 0%대 저성장 돌파 해법	https://kidd.co.kr/news/242278
2024년 여성관리자 패널조사	25.07.08.	뉴스웨이	포스코DX 여성 관리자 비율 8%… 유리천장 여전히 존재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5070716233051931

•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매체명	기사링크
25.07.08.	여성경제신문	여성 의원 최다 선출에도 정책은 제자리… 구조 안 바꾸면 변화 없다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946
25.07.14.	충청투데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없앨 특별법 제정 여부 주목	박상민 부연구위원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481
		교제폭력 신고 1만건… 구속은 1%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479



인공지능시대의 노동법적 과제에 관한 소고: 경제학, 사회학 및 법학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한국노동연구원)

🔍 인공지능에 의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가 필요한 가운데, 본 논문은 특히 법제, 그리고 법제 중에서도 노동법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①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소멸될 것인가에 대한 해외의 거시 경제학적 분석을 정리, ②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한 노동법적 과제에 관하여 일자리 소멸을 포함한 각 고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다 미시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검토, ③법학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법 규정과 동관계상 각 단계마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 설명을 진행함.

참고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2025년 제25권 제2호), 2025. 06. 30.]
https://www.kli.re.kr/kli/prdclView.es?pbclt_sn=10198&mid=a10103050000&nPage=1&sch_yr=&sch_type=&sch_keyword=&sch_prdcl=

성별 임금격차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근 들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성별 임금격차와 출산율이 함께 감소함.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감소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2013~2023년 시군별 패널자료를 구축해 이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함.

- 분석결과 여성 임금 상승이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출산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가 존재한다는 것과 동시에,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확률이 충분히 낮다면 여성 임금 상승은 소득 증가로 이어져 반대로 출산이 증가하는 소득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함.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제45권 제2호, 2025. 07.]
<https://www.kihasa.re.kr/hswr/v.45/2/2025>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국회입법조사처)

🔍 연령은 정책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소득·복지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노인기준연령 상향 방안을 논의해야 함. 이를 위해서 그간의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등과 현황을 바탕으로 3가지 주요 쟁점을 정리함.

- 노인기준연령 상향의 주요 쟁점은 ①사회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 축소, ②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인기 빈곤 심화, ③생산가능인구로의 편입과 일자리의 질 논의 등이 있음.

🔍 향후 국회를 비롯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공적연금 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노동정책, 기타 관련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2025. 04.]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90&brdSeq=47649>